

'지하철 건설·운영 사관학교' 서울시 어이없는 참사에 자존심 금가

뉴스 인사이트

'이해가 잘 안된다.' '우리로 감리를 철저히 하자.'

서울시의 강장구 지하철건설본부장 등 건설본부 관계자들은 20일 점심식사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예기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건설이든 운영이든 지하철에 관한 한 사실상 '종가'인 서울지하철 종사자로서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작잡하다.

●지하철 사관학교, 서울시
서울시는 대한민국 지하철의 사관학교나 다름없다.

지난 1970년대 초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8호선 운행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대구 지하철은 물론 부산·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 중인 시·도 지하철 공무원치고 서울시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곳은 없다.

이들은 건설본부 조직운영에서부터 사업시행 절차, 공사중 안전점검 및 공사발주요령 등 지하철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관련 자료를 챙겨갔다. 요즘에도 새로운 공법이나

대구사고에 일손 못잡아
"운영자 훈련미숙 아쉬워"

행정 노하우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인근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 부근 지하철 설계 때문에 직접 대전을 내려간 적이 있다. "면서 '대부분의 시·도에서 서울에 와서 몇달씩 근무하고 대전·대구·인천에는 사람도 보내준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 노하우는 해외수출까지
서울 지하철 건설에 대한 노하우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인근 부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서울지하철 건설 노하우에 대해 발표했다. 지하철 2개 노선을 운영 중인 테헤란 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추가건설을 앞두고 서울경험을 듣고 싶다고 요청해 왔기 때문. 이 부장은 "지하철 1~8호선 현황과 건설경과 사항 등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설명했다. "면서 "3월 입찰을 앞두고 수주경쟁에 뛰어들 국내업체들을 지원한 셈"이라고 귀띔했다.

운영 노하우도 마찬가지다. 지하철 공사 관계자는 "부산·대전·광주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이 우리 공사 종합사

령실을 둘러보고 홍보책자 등 관련 자료를 챙겨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시 관계자와 상하이시 부시장도 서울지하철을 보고 갔다. "면서 "같은 업종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안타깝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시 지하철 건설본부나 두 공사에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으나 '사관학교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이 금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학재 전 서울시 부시장은 대구 참사와 관련, "운영하는 사람이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데 군데군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면서 "건설이나 운영이 배워져 되는 게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같은 필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kdaily.com



대구지하철공사 직원들이 20일 종합사령실에서 부분 재개된 지하철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 특별취재반

국조실 차관급 신설 가능할까

국조실, 새정부 출범 앞서 대통령령으로 추진
행자부 "정부조직법 개정통해 신설해야" 제동

국무총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고 여러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숙원 사업은 장관급인 실장 밑에 차관급을 두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만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번엔야말로 반드시 '소원 성취' 하겠다는 생각이 다. 대통령령을 통한 기구개편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이 아닌 정

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신설을 주장하며 다소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는 오는 24일이다.

●국무조정실 입장 이미 문화상(女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처업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관급의 차장 한두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만큼 분위기는 성숙했다는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은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비서실 직제개편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만큼 국무조정실 차관급 신설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차장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 같다.

차장이란 직제 명칭을 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조직법은 차관 및 차장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 및 차장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가담에 국무조정실은 차관급 2명을 신설하되 차장이 아닌 조정관이란 명

칭을 사용. 가장 수석조정관·사회조정관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 입장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신설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것이 '정도(正道)'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청와대 비서실 개념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행자부는 청와대 비서실 기구개편도 엄격히 하면 정부조직의 테두리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이지만 관행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도록 해 왔을 뿐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의 비서실 관행을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무조정실이 편법으로 기구를 늘리려 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다른 정부 부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l@kdaily.com

'참여복지의 전령사' 막중한 역할

新 엘리트 관료

④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신 엘리트' 관료들에게는 참여복지시대 개막의 전령사라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됐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국민참여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화두를 실천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참여복지의 개념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구현, 정책의 국민참여 및 민주성 확보, 국가 책임의 강조 등으로 정리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큰 줄기 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공공보건의시스템을 구축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재설계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보육제도의 확대와 노인·장애인 대책도 핵심과제다.

따라서 참여복지 시대를 맞는 복지부의 신경세포는 참여복지의 주무부서인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산하 부서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국·연금보험국 등으로 뻗어왔다.

대입을 맡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복지부의 '제왕공명'인 송재성(56·행시16회) 국장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울 라운드 플레이어로 굼직굼직한 현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오적(五賊)'으로 몰려 무보직 이사관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14개월 동안 도를 닦은 뒤 지난해 12월 현직에 복귀했다. 인수위에서 파견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한직으로 폄하된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자리를 그가 복귀하



송재성 심의관 오대규 건강증진국장 노연홍 총무과장 주종미 보육과장

자 요직으로 탈바꿈한 것도 공교롭다. 소신파인 그의 또 한번의 변신이 기대된다.

의사 출신인 오대규(51·전북대의대) 건강증진국장은 94년 국립소록도병원장 임기를 끝내고 떠나 그의 앞을 환자들이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애원한 '소록도 전설'의 주인공이다. 온화하지만 개방마인드의 소유자. 국내 최대의 이익집단인 의료계의 장구역할을 하면서 치신도 깔끔하다. '일발레'로 소문난 김창순(53·행시22회) 청와대 복지노동비서관과 3년간의 주

임준규(46·행시34회) 보육급여과장은 업무를 안팎에서 철저하게 챙기고 매끄럽게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더십과 설득력도 겸비해 의료계의 높은 벽을 넘어 급여체계의 왜곡구조를 시정하고 수거구조의 모순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꼽힌다. 식약청 파견 등으로 능력에 비해 제대로 보직을 받지 못했지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노연홍(48·행시27회) 총무과장을 복지부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아래위의 신망이 두

기초생활보장 심의관 중심
건강증진국·연금보험국 주목

제비나 참사관 임기를 마친 문창진(50·행시22회) 국장 등 새로 복귀하는 22회 두 인제와 이상석(51·행시23회) 연금보험국장, 인수위 파견된 박하경(47·행시23회) 국립의료원 사무국장의 향후 행보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과장급 가운데 참여복지의 주무관 손건익(47·행시26회) 복지정책과장은 추진력이 강하고 선이 굵기 때문에 새 정부의 개혁과제 실천에 적임자로 꼽힌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강도태(33·행시35회) 의료급여과장의 임무도 막중하다. 다소 무뎠지만 젊고 추진력이 있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확대의 중책을 맡는 데 적격이라는 평이다.

주정미(35·행시33회) 보육과장의 활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계 파업 당시 정부측 대변인으로 당찬 모습을 보여준 주과장은 5세아 무상교육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육정책을 수립, 시행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밖에 비고시 출신의 만형으로 의료계와의 매끄러운 장구역할을 하는 진행근(55·광주교) 보건지원과장을 비롯, 노길상(47·행시26회) 건강정책과장, 이상영(49·행시26회) 기획예산담당관, 장재혁(39·행시34회) 행정관리담당관도 기대주들이다.

●노주석기자 joo@kdaily.com

순창우체국 등 56개 기관 행정서비스현장 마크 받아

전북 순창우체국 등 56개 행정기관이 2002년도 행정서비스 현장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서비스현장 마크'를 받는다. 행자부는 20일 전북 순창우체국은 '우체국 서비스현장', 경상남도

는 '소방 서비스현장', 충남 예산군은 '환경행정 서비스현장' 등 이들 3개 기관이 '서비스현장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제주 서귀포시는 '보건 서비스현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53개 행정기관이 최우수·우수·모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매일 2월10일자 21면 참고)

●조현석기자 hyun68@kdaily.com



대한민국은 전력선진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해...

2003년 1월 10일

한국전력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 및 노동생산성, 송배전손실률 등 안전의 주요 경영지표를 국제비교해 볼 때 한국전력이 다른 선진국의 전력기업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요지표 국제비교

지표	한국 2001	일본 2000	대만 2001	영국 2000	미국 2001
전기요금 (원/kWh)	77.06	196.73	80.44	95.29	94.95
노동생산성 (MWh/인원)	13,596	8,895	6,219	8,900	7,047
송배전손실률 (%)	4.50	6.20	5.46	8.90	8.90

한국전력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 및 노동생산성, 송배전손실률 등 안전의 주요 경영지표를 국제비교해 볼 때 한국전력이 다른 선진국의 전력기업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요지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 및 노동생산성, 송배전손실률 등 안전의 주요 경영지표를 국제비교해 볼 때 한국전력이 다른 선진국의 전력기업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전력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 및 노동생산성, 송배전손실률 등 안전의 주요 경영지표를 국제비교해 볼 때 한국전력이 다른 선진국의 전력기업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인환 yihaw@kepco.co.kr
* 위 이미지는 특정산업의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정부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1위

한국전력의 자부심, 여러분은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국전력은 국제비교에 있어 저렴한 요금수준과 높은 경영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가까운 일본의 40% 수준으로(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58%, 전기요금인상률 2.1%)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또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고, 송배전손실률 역시 영국과 미국의 8.9%, 일본의 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4.5%로서 경영과 기술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한국경제의 기동, 문화생활의 동반자 한국전력이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미아찾기, 한국전력이 함께합니다

www.kepco.co.kr